

광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1년

앱·CG업체 입주·투자 줄잇는다

<컴퓨터 그래픽>

문화전당권·kdb생명빌딩 등 4곳에 39만㎡

광주시 150억 규모 펀드 조성 기업 투자키로

광주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은지 1년을 맞았다. 문화산업 진흥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광주 투자진흥지구에는 문화산업체의 입주 및 투자유치가 이르면서 '문화로 떠나는 광주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남구 CGI센터와 동구 아시아문화전당권역, 서구 kdb생명빌딩 등 4개소 39만 1320㎡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는 영화 '해운대'와 '태왕사신기' 등의 후반작업을 맡았던 주도片面을 포함, 모두 45개 업체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앱(App)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문화전당권역에 구축한 광주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GSMAC)에는 개발팀들이 100% 입주, 모두 43건의 앱(App)을 개발했으며 현재 10개사가 창업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GSMAC는 올해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방송통신 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앱 개발 테스트베드(Test bed)' 공모사업에

당선됐으며, 내년에는 테스트 기기를 확대 구축하고 앱 개발 중소기업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기업유치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기업이 원하는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150억원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펀드를 조성, 광주로 이전하거나 광주 지역 기업이 제작한 유망한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어서 투자 진흥지구 활성화 및 기업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naver.com

삭감 내년예산 203억 올 정리추경으로?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 가운데 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7건 82억여 원을 정리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선기(민주·북구 1)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해당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가 정치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안을 깊이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을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만만치 않아 내년도 삭감 예산이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 예산을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편법인데다,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2011년도 정리 추경

정에서 일부 의사진행을 방해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회의 의사진행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이어 '2011년도 제2회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간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7건 82억여 원을 정리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선기(민주·북구 1)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해당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가 정치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안을 깊이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을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만만치 않아 내년도 삭감 예산이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 예산을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편법인데다,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2011년도 정리 추경

의회 역대 최대액 삭감 확정

市 추경안 82억 '편법' 논란

빛고을타운원장 항의 사퇴

F1 중계권료 안내고 개최권료 할증 없앤다

전남도-FOM 의견 접근…정부 지원여부가 관건

전남도가 F1대회 주관운영사인 FOM(Fomula One Management)과의 재협상에서 매년 지급해야 하는 중계권료(내년 대회 기준 1390만달러)를 내지 않고, 해마다 10%씩 오르게 돼있지만, 국내 방송사에서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15~30억원에 판매돼 협상 상황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매년 적자 규모가 500억원에 유팥하는 만큼 F1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적자 사업에 대한 국가의 원조성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정부 입장은 변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와 FOM은 일단, 내년도 대회부터 매년 지급해야 하는 TV 중계권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권료도 2013년 대회부터 할증(10%)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최권료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대회(3610만달러·381억)를 시작으로 2011년 3970만 달러(484억), 2012년 4370만 달러(환율 1146원 기준 500억원) 등 매년 10%씩 증액하도록 되 있지만 2013년 대회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최권료의 경우 전남도는 할증 제외 방안 이외에도 매년 3000

만 달러로 낮추는 안을 요구하는 바면, FOM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대회운영법인인 KA-VI가 가진 대회 개최권을 전남도로 이전하는 것도 협상 내용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백억대 적자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598억원의 적자를 낸 대회에서 TV 중계권료(148억원)를 내지 않더라도 450억원의 적자는 남는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들어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대회 개최를 안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하게 일면서 F1조직위원회가 올린 내년도 대회 운영비(150억) 중 필수 경비(15억)를 제외한 135억원을 차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예산심의 거부는 쇼" 파문

이정민 도의원 "집행부 요청"…상임위원장 일부 시인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지난 7일 F1(포뮬러원) 대회 예산안 심사 거부는 집행부 요청에 의한 '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정민(보성1·민노)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거부는 몇몇 의원들이 짠 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치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F1 조직위원회 출연금 150억원을 포함한 712억 원 규모의 도 투자정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면 거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거부를 도의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하지 않았다. 집행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요청한 것은 심사 연기 요청이 아닌, F1 대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시기 를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 일정이 끝난 뒤로 늦춰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가 열리는 만큼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며 집행부가 심사를 늦춰달라고 요구해 연기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꼼꼼한 예산 심사가 아닌,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일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F1 대회 예산안 심사 거부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데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요청한 것은 심사 연기 요청이 아닌, F1 대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시기를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 일정이 끝난 뒤로 늦춰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백용호 정책실장 후임은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 특보 중에서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유인촌 문화특보, 김영순 여성특보 등 5명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특보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12일 신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실장에 하급열·고용복지수석 노연홍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신임 대통령 실장에 하급열(62·사진) SBS 상임고문을 내정했다.

또 고용복지수석에 노연홍(5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수석급인 총무기획관에는 잠자사로(54)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에는 이동우(57)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금락 홍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 참모진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기획관 산하에 신설되는 총무1부서관에는 김오진(45)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총무2부서관에는 제승완 민정1부서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아울러 외신대변인에는 이미연(43)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을 내정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경매 특자

-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빙의·신병)

- ◆ 우울증·불안·대인 공포증
- ◆ 환경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주변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806, 010-3747-6606

공무원 특별자금

주최회 기획서비스 · 개인 및 기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사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율은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천만원 ~ 5천만원 / 대출금리 ~ 7.5% (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 ~ 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 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사용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D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0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등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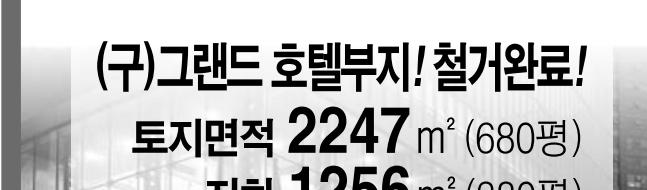
광주 최고의 입지!

권리금 없는 마지막 남은

충장로 황금상권

임 대!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료!
토지면적 2247 m² (680평)
지하 1256 m² (380평)



문의 1661-3232 | H.P 010-4794-8092

(주)미투종합건설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